

국회 예결위 지역 출신 대거 포진 국비 확보 청신호



위원장에 서삼석 의원 선출 지역 의원으로 역대 두번째 "국민 삶 힘이 되는 예산 편성" 위원 50명 중 10명 호남 출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총지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4일 선출됐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지난 16대 국회 전반기 새천년민주당 김중조(여수·4선)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이날 예결위 선임에서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여야의 지역 출신 의원이 10명에 달해 광주와 전남지역의 주

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을 새로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서삼석 의원, 행안위원장 김교흥, 교육위원장 김철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재정,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6명 모두 재선 의원이다.

서삼석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삶에 힘이 되는 정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야 예결위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의원은 "헌법 제54조의 정부가 편성 제출한 국가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국회 임무와 국가재정법 제61조 결산 심의 확정권에 대해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윤택해지는 간을 맞추는 소금 역할을 해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예결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장 교체는 민주당이 야당 몫인 해당 상임위에 새 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장의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21대 마지막 1년동안 예결위에서 활동할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민주당 28명, 국민의힘 19명, 비교섭단체 3명 등 모두 50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과 전북 출신 의원 9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선 김희재, 민형배, 이병훈 의원과 강진 출신 비례대표인 김경만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에선 전북의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전주혜(광주), 조수진(전북 익산), 김웅(순천) 의원 등 호남 출신 의원들이 들어갔다.

전체 50명의 예결위원 중 20%에 달하는 10명이 지역 출신 의원들로 채워진 셈이다.

예결위에 다수의 지역 출신 의원들이 포진됨에 따라, 호남지역 주요 사업들의 국비 예산 확보가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교육위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는 민 의원과 양향자 의원이 들어갔고, 소방청 의원은 법사위 간사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與에 '추경 편성' 촉구... 야 4당 협의 제안

"경제위기 충격 최소화 예방주사" 추경호 부총리 "검토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여당에 채택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야당 간의 공식 협의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세사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대출 만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누가 그렇게 말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딴냐"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공개 만남이라도 받아들여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야 4당 간의 공식 협상도 제안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도 "추경은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 경제 위기 충격을 최소화할 줄이는 예방 주사 역할을 추경이 할 것"이라며 "만드시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 대표들을 만나 비상경제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이번 추경은 물론이고 준비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게 꼭 필요하다.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걱정하면서 그것과 별개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감사원, 권익위 보고서 조작...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 수정한 뒤 무단으로 일반에 공개했다며 책임자 파면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책임자 즉각 파면 및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악행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며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자룡 헌 칼 쓰듯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이제는 월권여까지 손을 뻗은 감사원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각 조사해 파면하라. 그리

고 그 뒷배가 누구인지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고발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 방통위, 한국개발연구원 등 이전 정부 임명 기관장 표적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건,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실태 등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겨냥한 정치 감사가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국회가 나서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 행위의 뿌리를 찾아 뽑아내야 한다. 망가지다 못해 자멸하고 있는 감사원에 헌법정신을 불어넣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의) 최종 의결 기관인데 그걸 형해화시켰다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며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단순 정치적 차원의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명백하게 형사적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 혁신위원장 후보 정밀 검증... 외부인사 3명 압축

김태일·정근식·김은경 등 SNS 발인·재산 형성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장 후보로 김태일 전 장관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압축한 가운데, 이들을 정밀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들 3명의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치지 못해 발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5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재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발언 논란으로 9시간 만에 낙마한 이후 검증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후보자들의 과거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상의 발언과 재산 형성과정 등을

살펴보는 등 제2의 낙마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와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직을 맡아 공개된 재산 자료가 남아 있어 검증이 수월하지만, 김 전 총장의 경우 공직을 맡은 경험이 없어 별도의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정 교수와 김 교수의 2파전 구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후보에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기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원장 인선을 계파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 교수와 김 교수가 각각 친명, 친문계에서 선호하는 인물이라는 얘기가.

비문계에선 김 전 총장을 적극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최근까지 언론 기고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의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대로 정 교수와 김 교수는 정무적 판단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총선 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적당한 혁신을 적당히 눈감아줄 국민은 이제 없다.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혁신은 철저히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정권 교체도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재갑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방지법" 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은 14일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위조한 경우 등

5가지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는 마련돼 있지 않아 피상속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사망 보험금을 수령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 자



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자식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일부 무책임한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